

노회찬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원주 민간주도의
통합돌봄 실천사례와 함의

2024.12.

박준영, 염은경, 천혜란, 하태화

본 연구보고서는 노회찬 재단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출문

노회찬 재단 귀하

본 보고서를 “원주 민간주도의 통합돌봄 실천사례와 함의”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박준영(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염은경(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재택의료팀장)
천혜란(위드커뮤니티협동조합 이사장)
하태화(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9 2. 연구 목적 16 3. 연구방법 및 구성 16
제2장 통합돌봄 관련 논의	1. 강원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G-care) 모델 구축 ... 21 2. 협동조합 방식의 돌봄공동체 관련 논의 28 3. 의료기반의 통합돌봄 체계의 구축 31
제3장 통합돌봄 실천사례 (I)	1. 원주형 통합돌봄 선도모델 사업 36 2. 주거약자 지원사업 “어울림 커뮤니티” 53
제4장 통합돌봄 실천사례 (II)	1.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방문진료, 건강반장 65 2. 원주한살림생협 : 주거복지 72 3.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 원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73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주요결과 및 시사점 76 2. 원주형 통합돌봄 모델구축을 위한 제언 80

[표 목차]

[표 1-1]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역.....	11
[표 2-1]	원주네트워크의 돌봄공동체 만들기 추진 경과.....	29
[표 2-2]	사회적경제 강원돌봄네트워크 회원사(3개소)	32
[표 3-1]	원주시 읍면동 노인인구비율	36
[표 3-2]	원주형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37
[표 3-3]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설치 유형.....	39
[표 3-4]	정책대상별 선도사업 모델 구성	43
[표 3-5]	정책대상별 지원사업	44
[표 3-6]	연계기관 현황 및 역할	56
[표 3-7]	참여자 수 및 구성.....	56
[표 3-8]	주요 사업 실적	57
[표 3-9]	정량적 성과	57
[표 4-1]	제도권내 재택의료 사업	66
[표 4-2]	비제도권내 재택의료 및 협력사업.....	67

[그림 목차]

[그림 1-1]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09
[그림 1-2]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09
[그림 1-3]	노인대상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	10
[그림 1-4]	전문기관의 역할 (노인통합지원센터)	12
[그림 2-1]	강원도형 복지커뮤니티 구상	26
[그림 3-1]	지역케어회의 운영	41
[그림 4-1]	재가 의료급여 의료지원 체계도	67
[그림 4-2]	포괄적 평가의 의미	68
[그림 4-3]	케어매니저의 직무.....	69
[그림 4-4]	사례적용 흐름도	70
[그림 4-5]	구체적 중재를 통한 지역자원 및 치료진 연계.....	71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배경

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추진

1) 돌봄 필요 노인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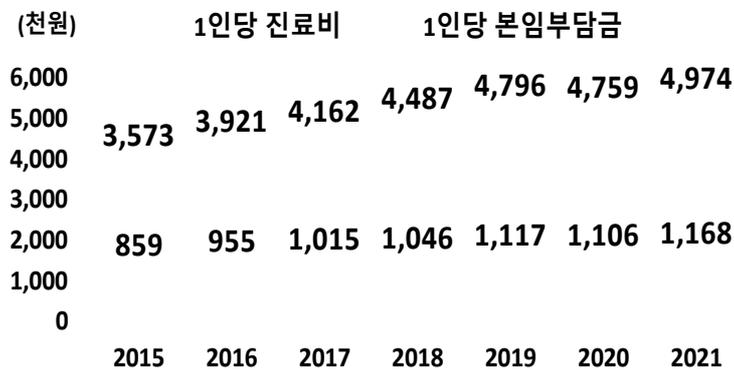
- 후기노인인구 급증 (2017년 283만 명 --> 2037년 721만 명 예측)
 -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의료-요양서비스 이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 희망 56.5% (노인실태조사, 2020)

[그림1-1]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그림1-2]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2) 재가기반 의료-돌봄 인프라 미흡

- 의료기관 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중심으로 인한 거동불편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한계
- 급성기병원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기반 의료-돌봄 통합적 제공체계 미흡
-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충분성, 다양성 부족에 따른 재가돌봄 충분성 한계
- 장기요양 진입 전 예방대상자를 위한 통합적,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 미흡
- 돌봄에 초점을 맞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미흡

3) 지역단위 의료-돌봄 컨트롤타워 부재

-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대상 의료-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옴
- 선제적 대상자 발굴, 시의 적절성, 효과적 보건-복지체계 구축 미흡

4) 지역단위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제고 및 독립성 유지를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추진.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을 목표로 선도사업 실시
- 2019년 6월부터 16개 지자체에 순차적으로 선도사업 실시(2019~2022)

[그림 1-3] 노인대상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



(자료:보건복지부(2018.11.20.), 노인대상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표 1-1]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역

구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1차 지역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경기 화성시
2차 지역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 부산진구, 부산 북구, 충북 진천, 충남 청양군		

5)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 주요 방향

- 요양병원(시설) 이용, 장기요양 제도권 진입을 앞둔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의료-돌봄 연계체계 고도화

○ 시범사업 수행기간 : 2023년 7월 ~ 2025년 12월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개소)

(예산지원형) 광주 서구, 북구, 대전 유성구, 대덕구, 경기 부천/안산, 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북 의성, 경남 김해

(기술지원형)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 안성, 남양주, 강원 춘천, 횡성, 충북 증평, 괴산, 음성, 충남 청양, 전북 정읍, 전남 목포, 담양, 영광, 경북 포항, 상주, 제주 제주시

○ 예산 : 24년 기준 68.6억

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지원법)」 제정¹⁾

1) 통합지원법의 제안 이유²⁾

-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장기요양·사회복지 사업들이 건강이나 필요도와 무관하게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

1) 2024.2.29. 본회의 통과, 2024.3.26. 공포

2) 보건복지위원장 대안 제안 이유 (입법선언, 2024.2.29)

관과 정보 고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

○ 시·군·구의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

- 신청의 대상, 발굴·직권 신청
- 퇴원환자 등 지역사회 복귀 계획
- 신청인에 대한 조사
- 의료적 필요도, 요양·돌봄 필요도 등 판정의 최종 주체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 제공 및 연계
- 지역 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

○ 전문기관의 역할(전문서)

- 대상자 발굴
- 신청 창구, 네트워크
- 신청인에 대한 욕구조사
- 의료적 필요도, 요양·돌봄 필요도 등 통합판정 운영 --> 종합판정
- 통합재가계획 수립
- 통합지원 제공 및 연계
- 지역 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

[그림1-4] 전문기관의 역할(노인통합지원센터)



자료: 보건복지부(2024.3.21.), 주요정책 추진계획

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추진

1)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및 다변화

- 고령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한편, 1인 가구 급증, 국민 인식 변화 등으로 전통적 가족돌봄 기능은 약화 추세
- 요양, 활동지원 등 기존의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를 넘어 심리·정서,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서비스 욕구가 점차 다변화
(예) 가족돌봄청년은 돌봄·휴식·심리·문화 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 욕구 보유 (복지부, 2023)

2)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등 서비스 사각지대

- 기존 사회서비스는 노인·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되어 중장년, 청년(가족돌봄) 등은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존재
 - (중장년)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있어도 소득기준으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움
 - (가족돌봄청년) 돌봄 부담으로 미래설계에 제약을 받는 청년 대상 서비스 불충분, 이들에 대한 지지 부족이 사회문제로 급부상

3) 서비스 저변 확대·선택권 보장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선도

-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 본격 추진('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2023.5.31.)
 -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통합 제공을 통한 규모화 지원 등 혁신 요구

라.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추진 방향

1)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기존에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 서비스 제공
 - 新 사각지대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공백 해소
- 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외에도 심리 지원, 교류관계 증진 등 수요 기반 신규 서비스 제공
- 기존의 개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이용자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개선, 대상자의 삶의 질 제고

* (기존) 수요자는 각 서비스별 정보 수집 후, 개별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 -->
(개선) 서비스 목록에서 수요를 기반으로 2~3개 서비스를 함께 신청, 이용

2)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확대 추진

- 고도화 추진에 따라 이용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자 제한을 없애고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도 소득이 아닌 욕구를 기반으로 하되,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비율은 소득에 따른 기준 적용
 - * (기존) 기준중위소득 140%~160% 이하로 이용자 제한 -->
 - (개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

3)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제공 여건 조성

- 시·도 단위로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제공기관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품질 제고
- 주기적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제공인력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4) 서비스 개발·연계·제공에 있어 지역 자율 존중

- 각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 특성이 다른 만큼, 서비스 개발·제공 및 연계 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 중장년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해당 가구에 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자 특성, 지역상황에 맞는 전달체계 구성 및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

5)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한 고도화 선도사례 창출

-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추진 초기, 고도화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할 필요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따른 핵심 사업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도화 선도사례 창출
- 2023년은 일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 후, 2024년 이후 대상자 범위 및 사업지역의 단계적 확대 추진
 - 사업추진과 함께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해 고도화 및 서비스의 효과 검증을 거쳐 전국 확대여부 검토

마. 강원형 통합돌봄모델 개발의 필요

1) ‘탈 시설’ 중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은 ‘탈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입소 중인 돌봄 대상자를 지역사회로 보내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주거지원 인프라를 확

충하고 방문의료와 재가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

- 현재 선도사업은 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복지관 등의 돌봄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방문 건강관리와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의료와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
- 선도사업은 의료와 돌봄의 연계전략으로 주거지원과 간호의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활성화, 집중형 건강관리,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맞춤형 재활 등을 제시하는데 농촌은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환경³⁾

2) 농산간어촌 돌봄사업의 어려움

- 농산간어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 지리적 환경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선도사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농산간어촌은 의료와 돌봄 관련 기반 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하고 돌봄과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함
- 농산간어촌 돌봄의 문제점은 과소화와 서비스 접근성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큼
- 지리적 불리함과 열악한 돌봄시설, 부족한 인적자원을 극복하고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우리지역의 돌봄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함

3) 주민주도 돌봄 공동체 체계 필요

- 돌봄 제공자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신뢰를 기반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상호 작용이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는 도심형이라기보다는 도농복합 또는 농촌형 커뮤니티케어에 가까우며, 면 중심의 통합돌봄의 거점시설이나 마을단위의 소규모 생활돌봄을 통한 돌봄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목적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조직의 주도로, 돌봄이 필요하나 공적 돌봄체계 밖에 있는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돌봄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함께 돌보고 돌봄을 받는 돌봄 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

3) 김남훈/하인혜(2020), 「농촌형 커뮤니티케어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면)

2. 연구 목적

- 원주지역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민간 중심의 통합돌봄 실천사례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고자 함
- 실천 사례들의 검토 후, 지역사회에서 전개될 통합돌봄의 함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3. 연구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통합돌봄에 대한 이론적 연구라기보다는 행정과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역돌봄을 위한 실천 사례들을 수집, 검토하여 그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나. 구성

-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였음.
 -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법]을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변화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됨. 이를 통해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선도하고자 함
 - 일상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QOL(삶의 질) 제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확대 추진,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제공 여건 조성, 서비스 개발·연계·제공에 있어 지역 자율의 존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한 고도화 선도 사례 창출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농산간어촌 지역에서의 돌봄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돌봄 서비스를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을 피하고 어떻게 연계하여 강원도 환경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지 제언의 필요성을 기술함
- 제2장에서는 원주 지역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통합돌봄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음
 - 강원도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강원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G-care) 모델 구축에 대한 논의 및 실천에 대해 기술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협동조합 방식의 돌봄 공동체를 위한 논의에 대해 기술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를 기반으로 한 지역 돌봄을 위한 사업 및 실천에

대해 기술

- 제3장에서는 행정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진행하였던 통합돌봄 실천사례에 대해 기술
 - 2020년부터 1년간 원주에서 시행하였던 [원주형 통합돌봄 선도모델 사업]에 대해 기술
 -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약자 지원사업 “어울림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 기술

- 제4장에서는 민간,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실천사례에 대해 기술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반장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기술
 - 원주한살림생협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기술
 -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의 [원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위탁운영 사례에 대해 기술

-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요결과 및 시사점, 그리고 원주에 적합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언

제2장

지역의 통합돌봄 관련 논의

1. 강원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G-care) 모델 구축
2. 협동조합 방식의 돌봄공동체 관련 논의
3. 의료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1. 강원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G-care) 모델 구축에 대한 논의

가. 강원형 돌봄 모델 개발의 필요

- 2021년 고령인구의 비중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 지역은 전남 23.8%, 경북 21.5%, 전북 21.4%이며, 그 뒤를 이어 강원이 20.9%로 강원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2023년 12월 말 기준 강원도 고령화율 23.99%, 전남, 경북에 이어 강원 3위)
- 지속가능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가 진행되고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돌봄방식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노인 요양을 담당해왔으나,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되면서 고령자 돌봄은 요양시설 위주로 해결
-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고령자의 증가는 의료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며, 2021년 65세 이상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40조 4,347억 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95조 4,802억 원) 중 42.3% 차지
- 고령화에 따른 의료재정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보건복지서비스 정책 대안으로 내놓고 추진중이며, 커뮤니티케어는 대상자에게 익숙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둠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복지관 등의 돌봄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방문 건강관리와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의료와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
- 의료와 돌봄의 연계전략으로, 주거지원과 간호의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활성화, 집중형 건강관리, 재택장기요양서비스, 맞춤형 재활 등을 제시
-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은 '탈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입소 중인 돌봄 대상자를 지역사회로 보내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문 의료와 재가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
- 현재 선도사업은 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복지관 등의 돌봄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방문 건강관리와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의료와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

- 그러나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 지리적 환경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선도사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데, 농촌은 의료와 돌봄 관련 기반 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하고 돌봄과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함
- 지리적 불리함과 열악한 돌봄시설, 부족한 인적자원을 극복하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농촌 주민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농촌 돌봄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함
- 강원도는 도심형이라기보다는 도농복합 또는 농촌형 커뮤니티케어에 가까우며, 면 중심의 통합돌봄의 거점시설이나 마을단위의 소규모 생활돌봄을 통한 돌봄모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목적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조직의 주도로, 돌봄이 필요하나 공적 돌봄체계 밖에 있는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돌봄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함께 돌보고 돌봄을 받는 돌봄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

나. 강원도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G-케어)이란

- G-care(강원도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란 [강원도형 복지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마을돌봄’을 기반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요양-생활지원-거점시설’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시스템을 의미
- G-케어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 사회적경제 조직을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 서비스
 - 공동체 모임을 시작으로 하는 주민참여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 다양한 사례 발굴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 강원도 내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즉, 지리적 불리함, 열악한 돌봄시설, 부족한 인적자원을 가진 강원도의 농산어촌의 현실 속에서 소득보장과 고용, 보건과 의료, 보육과 교육, 주거와 먹거리, 문화와 여가 등 강원도민의 행복한 삶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복지시스템을 보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사회적경제-공공-지자체 간의 협력과 연대를 구축하는 것

다. 강원도형 통합돌봄(G-케어) 모델의 필요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자연 환경적 특성

○ 강원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① 인구 감소 문제와 고령화

- 현재 강원도는 인구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상태이며, 산업화와 생산성 저하 문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접경지역 인구 유출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인구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지역 다수 포함
- 노인인구의 자연적 증가에 비해 청년과 중장년층의 유입이 매우 저조하며 넓은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상태임

② 돌봄서비스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

-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강원도 지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대상 인원이 적을뿐 아니라, 분포도 넓기에 자차 소유없이 활동영역에 종사하기가 쉽지 않아 인력구인난 예상

○ 강원도의 지리적 및 환경적 특성

- 강원도는 국토의 대부분이 임야와 농촌지역으로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 지리적 환경이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응급 의료는 매우 취약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의료서비스적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보완 필요
- 강원도 돌봄의 문제점은 과소화와 이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문제임

2) 강원도형 통합돌봄의 주요 추구 내용과 특징

○ 사회적경제 조직을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 서비스

①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가치

- 사회적경제란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사이의 모든 조직(OECD, 2007)을 의미하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의미, 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재의 성격

○ 사회적 경제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의 재생
- 남녀의 기회 평등
-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 구성원의 회복
- 공동체의 이익 실현
- 윤리적 생산과 유통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그 밖의 노동, 복지, 인권, 환경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 ② 강원도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가치가 중요한 이유
 -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근간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부터 시작
 - 강원도의 열악한 산업인프라와 인구소멸 위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필요
 - 특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구가 부족한 강원도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구소멸 위험을 낮춰 줄 사회구성원의 네트워크 공동체 사회 조성 가능

- 공동체모임을 시작으로 설립한 주민참여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 ① 공동체 자본주의를 위한 주민참여 효과 극대화
 - 지역사회를 떠나기 싫어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 노인들의 매칭으로 기존 주민들과 새로 진입하는 귀농·귀촌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마중물 역할
 - 위기에 빠진 농촌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와 공동체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지역성 가치 부각으로 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참여가 절실함

 - ② 전통적인 자조연결망(self-help network)을 반영
 - 농촌생활은 농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안팎의 다양한 사람, 단체, 기관 등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며, 마을주민이 스스로 함께 나서 학습하고 협력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문제해결을 하며 이미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어 학습조직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자연스럽게 육성 가능

- 다양한 모델 사례 발굴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① G-케어매니저 육성을 통한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강원도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G-케어)는 마을 공동체 기반의 강원도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내 마을로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돌봄케어 추구
 - 돌봄코디네이터(G-케어매니저) 양성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 연계 가능성 검토 및 마을 내 활동가 발굴과 양성 추진
 - 돌봄코디네이터 교육커리큘럼 및 현장실습 체계 구축
 - 현장실습 워크북과 다양한 매뉴얼 검토
 -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등 여러 형태의 사례 경험 추구
 -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언제든지 서비스 수정이 가능한 의견수렴형 사업
 -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기관서비스의 복지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관계 기반형 서비스 제공으로 공동체 사회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하며, 주민이 이웃주민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는 관점으로 지역돌봄 서비스공동체 추구

- 강원도 내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① 지속성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의 이익 창출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으로 정부 지원에 의해 지원금을 받아 유지하는 조직들이 많으나 사회서비스 요구증대로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함
- 특히,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연구에서 기업 간,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된바, 강원도 내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업 안정성을 추구해야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3) 강원도형 통합돌봄의 주요 키워드

○ 농촌 돌봄체계 기반형

- 강원도의 돌봄서비스는 지리적 불리함과 열악한 돌봄 시설, 부족한 인적자원을 극복하고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하고, 농촌주민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농촌 돌봄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돌봄 제공자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신뢰를 기반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상호 작용이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목적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조직의 주도로, 돌봄이 필요하나 공적 돌봄체계 밖에 있는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돌봄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함께 돌보고 돌봄을 받는 돌봄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를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함

○ 면 중심의 통합돌봄 거점시설 또는 마을 단위

- 강원도는 도심형이라기보다는 도농복합 또는 농촌형 커뮤니티케어에 가까우며, 면 중심의 통합돌봄의 거점시설이나 마을 단위의 소규모 생활돌봄을 통한 통합돌봄모델을 추구, 익숙한 본인의 주거지를 기반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추구
- 이웃주민이 가장 케어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가장 잘 이해하며, 편안한 상대이기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 보건의료서비스 접목 필요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병원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 강원도는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간호사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커뮤니티에 도입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

○ 사회적경제조직 주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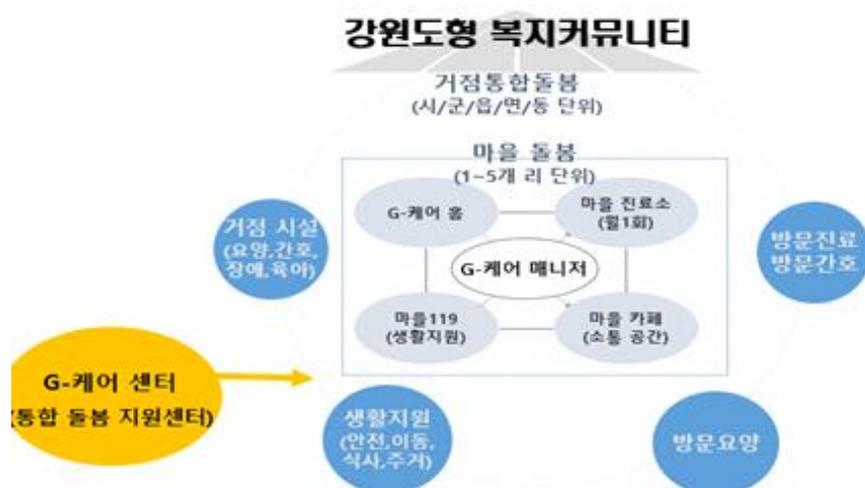
- 주민돌봄조직은 법인의 형태로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들 수 있으며, 주민돌봄 조직의 구성과 목적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고려 필요
- 사회적협동조합은 돌봄을 제공하는 주민과 돌봄을 받는 주민(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돌봄을 제공하는 공익적인 목적에도 부합

라. G-케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언

1) 강원도의 커뮤니티케어

- 지역복지가 지향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신체적·심리적·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생활을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복지자원을 지역사회에서 발굴·확보하는 것
- 농촌형 커뮤니티케어의 목적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조직의 주도로, 돌봄이 필요하나 공적 돌봄체계 밖에 있는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돌봄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함께 돌보고 돌봄을 받는 돌봄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를 회복하는 것이 농촌형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 강원도는 도심형이라기보다는 도농복합 또는 농촌형 커뮤니티케어에 가까우며, 면 중심의 통합돌봄의 거점시설이나 마을단위의 소규모 생활돌봄을 통한 돌봄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됨. 특히 사회적경제를 토대로 주민참가와 역량강화, 자원개발 등을 통해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양한 커뮤니티가 상호 연계하여 협력하고,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
- G-care(강원도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란 [강원도형 복지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마을돌봄’을 기반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요양-생활지원-거점시설’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시스템을 의미

[그림 2-1] 강원도형 복지커뮤니티 구상



자료 : 강원도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G-케어)실증 시범사업 연구용역(2022)

○ G-케어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 사회적경제 조직을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 서비스,
- 공동체 모임을 시작으로 하는 주민참여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 다양한 사례 발굴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 강원도 내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즉, 지리적 불리함, 열악한 돌봄시설, 부족한 인적자원을 가진 강원도의 농산어촌의 현실 속에서 소득보장과 고용, 보건과 의료, 보육과 교육, 주거와 먹거리, 문화와 여가 등 강원도민의 행복한 삶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복지 시스템을 보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사회적경제-공공-지자체 간의 협력과 연대를 구축하는 것

2. 협동조합 방식의 돌봄공동체 관련 논의

- 협동조합의 본질은 공통의 문제, 필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
- 협동조합의 출범은 5명의 발기인을 모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 필요, 욕구 등을 찾는 활동에서 시작되어야 함. 그 위에서 주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예방한다는 지역복지와 협동조합이 궤를 같이할 수 있음
- 개인 또는 개별 협동조합의 미션만으로는 지역 주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지역의 다양한 생활 문제를 해결·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연대가 중요한 과제가 되며,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력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함

가. 돌봄 공동체 만들기 도전

- 원주가 협동조합도시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배경에는 50여 년간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협동운동의 경험이 전승되고 있는 것과 기존의 운동방식을 반성·검토하면서 지속적으로 운동의 형태나 내용을 진화시켜 온 것이 있음
- 원주협동조합운동의 특징은 개별 협동조합의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well-being)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 있음
- 분야·영역 등의 경계를 초월한 협력이야말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성을 높이는 중요한 힘이 되는데 원주는 그 가능성을 보여줌
- 원주네트워크 내에서는 2016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 일본의 생활클럽 치바그룹⁴⁾과의 정기적인 교류 속에서 사회복지법인 생활클럽풍의 마을 등을 방문하여 선구적인 돌봄 시스템을 조사하고 학습·논의하면서 원주지역 돌봄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
 - 이들이 그리는 돌봄공동체는 원주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만들어내려는 '복지협동 모델'을 제안하려는 것

4)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생활클럽 무지개거리), 사회복지법인 생활클럽(생활클럽 바람의 마을), NPO법인 비누마을, NPO법인 워커즈컬렉티브 치바연합회, 인정 NPO법인 커뮤니티케어 마을네트, NPO법인 지구시민교류기금 EARTHIAN, 인정 NPO법인 치바 시민활동·시민사업 지원클럽(NPO클럽), NPO법인 하구쿠미의숲을 지지하는 모임, NPO법인 유니버설 취업 네트워크 치바(9조직)

- 이용자로서 받는 케어뿐만 아니라 자신이 케어의 주체가 되는 적극적인 케어, 선택적인 케어가 아닌 보편적인 케어를 실현해 나가자는 것을 미션으로 함. 아직 그 움직임은 작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지역의 다양한 영역의 조직과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돌봄공동체를 향한 대처가 기대됨

[표 2-1] 원주네트워크의 돌봄공동체 만들기 추진 경과

년월	주요내용
2016. 3~5	돌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회의(3회)
2016.5~2019.9	사회복지법인 생활클럽 연수(5회) 약 90명 참가 - 복지네트워크 회원단체, 원주시의회, 원주시, 강원도, 영월군, 횡성군
2016.8	<돌봄학습> 김기섭 「협동조합을 통한 복지사회의 길」
2016.12	<특별초청강연>鈴木 勉(스즈키 츠토무, 북교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본의 복지협동운동의 전개와 주민자치의 과제」
2018.4	<원주시초청강연> 池田 徹(이케다 토오루, 사회복지법인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 이사장) 「누구도 고립시키지 않는 지역 만들기~바람의 마을 방식의 지역포괄케어 실천과 이념」
2018.6	<돌봄학습> 조성기(아울연구소 소장) 「원주의 돌봄공동체 전략」
2018.9	돌봄사업의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
2018.11~2019.2	돌봄공동체의 추진위원회 실무팀 회의 (매주 수요일 개최) - 원주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돌봄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 - 회원단체의 돌봄사업에 대한 니즈 조사 - 사업목적, 조직형태, 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범위 등 - 지역포괄케어 특별위원회의 운영규정안 작성 및 검토 등에 대하여
2019.4~6	원주네트워크 회원단체의 현황조사 및 인터뷰 실시
2019.7	원주협동조직의 사업현황 조사발표 및 간담회
2019.9~2020.2	지역포괄케어 특별위원회 (매월 1회 개최) (참가)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원주생협, 원주한살림, 원주생명농업,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강원신용보증기금, 원주성공회나눔의집, 큰나무사회적협동조합, 밝음신용협동조합, 토요영농조합법인, 원주장례복지문화원, 마루장례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향후, 비영리·복지 협동 조직이, 어떻게 지역의 요구에 응해, 한층 더 조직화에 의한 그 운영 기반을 충실하게 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 단순히 서비스 제공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정보 제공, 학습·계발 활동, 이용자의 권리 옹호의 시점으로부터의 서비스의 질에 관한 감시 활동을 실시하는 ombudsman적인 민간 비영리 조직의 역할도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됨

3. 의료기반 통합돌봄 중심의 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분절성과 비연속성, 사회서비스의 지방분권화 및 시장화,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제공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성 참여와 신뢰, 협동과 호혜의 실천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새로운 실천주체로서 모델이 될 수 있음

-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은 통합돌봄 제공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통한 지역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은 지속가능한 돌봄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나. 사업개요

- 사업명 : 강원도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 상품개발 및 시범운영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12.월 (8개월)
- 사업목적 :
 - 강원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방문 진료,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사 중심의 노인요양서비스 한계를 극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중심의 통합돌봄 상품개발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 사업내용 :
 - 의료중심 지역커뮤니티케어 모델 및 상품 개발
 - 의료 등 통합돌봄 사례관리 시범운영을 통한 모델 및 상품개발
 - 의료 통합돌봄서비스 실행을 위한 돌봄기업 역량강화 교육
 - 강원도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
 - 지역커뮤니티케어 확산을 위한 보고서 발간
 - 의료중심 지역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운영
- 사업대상 : 「사회적경제 강원돌봄네트워크」 회원사(3개소)

지역	회원사명	업종	역할	인증구분
원주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돌봄	방문진료 및 통합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영월	영월군돌봄서비스센터	돌봄	방문간호 및 통합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횡성	횡성열린사회서비스센터	돌봄	방문간호 및 통합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표 2-2] 사회적경제 강원돌봄네트워크 회원사(3개소)

다. 사업성과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신체·정신·사회건강의 다차원적인 영역에서의 통합 돌봄 제공을 통해 노인의 총체적 건강 관리 기능 강화
- 사각지대 취약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문제 예방
- 노인 스스로 생존과 건강 주체로써 자조능력을 배양하고 삶의 질 향상

○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및 성장 지원

-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돌봄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경쟁력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돌봄네트워크 구축 및 돌봄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적정 이윤 창출

○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 기업은 비영리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어 기업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으로 차별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경제 기업의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은 지역사회에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령화 사회에 통합돌봄서비스가 비영리적 가치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음

제3장

통합돌봄 실천사례(I)

1. 원주형 통합돌봄 선도모델 사업
2. 주거약자 지원사업 “어울림 커뮤니티”

1. 원주형 통합돌봄 선도모델 사업 - 원주시(2020)

- 노인분야 요약정리 -

제1장 원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행계획

(1)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의 필요성 증가

- 원주시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349,215명이며, 노인인구는 49,983명으로 노인인구 비율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함
- 전국 인구 51,850,705명, 강원도 인구 1,540,897명
- 원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별 노인비율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돌봄 체계 구축 필요

읍면동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 · ·	단구동	지정면	반곡관설동
노인비율(%)	42.07	37.20	32.85		10.41	7.81	6.85

[표 3-1] 원주시 읍면동 노인인구비율

■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의 필요성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는 4인 가구 비중이 높았으나 2015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노인도 1인 가구 증가 추세)
-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 돌봄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사회의 돌봄요구 증가 ⇒ 가족 돌봄의 한계는 지역사회돌봄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 전체 노인의 89.5%가 만성질환을 보유. 특히 73.0% 이상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건강 및 돌봄의 욕구 증대 예상 (출처 : 2017 노인실태조사)

■ 분절화된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 지역사회에서 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상자의 조건 충족과 중복서비스 이용 불가로 복합적인 욕구 대응 부족
- 이용자가 각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신청한 후 이용 가능한 상황

(2) 추진경과

■ 강원도형「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지자체」선정

- 2019.11.18. 2019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현장기반 커뮤니티케어 이해)

- 2019.12.13. 원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간담회
- 2020.01.15. 강원도 선도사업 추진 관련 시·군 간담회
- 2020.02.27. 강원도 공모사업 신청
- 2020.03.20. 사업계획발표 및 강원도 심사
- 2020.03.24. 선도 지자체 선정(원주시- 노인분야, 춘천시- 장애인분야)

■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

- 2020.04.2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단 업무 협의
- 2020.04.28. 원주시의사회(회장 장지영)와 업무 협의
- 2020.05.04. 원주시 지역사회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2020.05.08. 2020년 원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컨설팅(강원도 주최)
- 2020.05.12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을관리소 공모 설명회
- 2020.05.13 제2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
- 2020.05.13 KT 안심생활지원(IOT·AI기반 스마트홈서비스) 설명회
- 2020.05.14.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건강이음사업 설명회
- 2020.05.22.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후보지 실사
- 2020.05.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케어분과 간담회
- 2020.05.26. 원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행 계획서 강원도 제출
- 2020.06.01. 원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개시

(3) 추진 로드맵

[표3-2] 원주형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구 분	1단계 기반 구축기 (2020년~2022년)	2단계 확대기 (2023년~2025년)	3단계 완성기 (2026년 ~)
대상자	노인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전 시민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사업 실시 및 인프라 확충단계 • 시민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 대상자 확대로 돌봄 일자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 • 원주형 커뮤니티케어 이론적 정립

(4) 비전 및 목표

■ 비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는 편안하고 행복한 원주

■ 목표

- 이웃과 함께하는 원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돌봄 서비스 구현
-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관·학 협력 케어 시스템 정착

■세부과제

- 병원에서 가정으로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 병원, 시설, 재가를 연결하는 통합 사회서비스 개발
 - 지역케어회의 활성화로 최적의 서비스 연계 제공
 -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및 병원 통원서비스 제공
- 이웃과 함께하는 케어 전달체계 구축
 - 권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재가 서비스 제공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주민이 주민을 보살피는 체계 활성화
 - 마을관리소와 건강반장 사업으로 이웃 돌봄 체계 구축
- 원주형 어울림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민·관·학 협력 환경 조성
 - 원주지역 대학과 종합복지관, 혁신도시공공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조성
 - 커뮤니티케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 워크숍 실시
-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생활 보장
 - 이용자 욕구와 상황에 맞는 주거정비와 공급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LH한국주택공사와 연계된 케어 인프라 구축

■성과지표

- 지역케어회의(돌봄 노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
- 이웃돌봄인 마을관리소, 건강반장 활용 실적
- 커뮤니티케어협의체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실적
- 이용자 만족도

2.공통기반 구축

(1)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설치

■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기능

- 다직종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복지부서(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와 보건소 등 관련부서와 읍면동, 민간기관 간 능동적 연계체계 구축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등 추진방향 설정
- 읍면동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모색

- 장기입원환자, 시설입소자, 독거노인 등 수요자 발굴 지원
- 다양한 케어 자원 발굴
 - 자원 DB구축, 인적(돌봄기관·단체·개인) 물적(후원금·품) 자원 발굴
- 복합적이고 고난이도의 사례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
 - 통합사례관리 및 솔루션 회의, 지역케어회의 운영
 - ☞ 선도사업총괄팀 설치 전까지 지역복지팀과 희망복지팀에서 선도사업 총괄팀 수행

(2) 케어안내창구

■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설치

- (설치대상) 8개 읍면동
- (설치팀명) 커뮤니티케어 안내창구 (원주시 자체명 : 맞춤형복지팀)
- (설치방법) 행정체계 및 인구규모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설치
 - 8개소 모두 2유형으로 설치
 - 찾아가는 복지팀(맞춤형복지팀) + 케어담당인력 배치
 - ☞ 원주시는 읍 1, 면 2(소초면, 흥업면), 동 13개소에 맞춤형복지팀(기본형) 2019.7.1. 설치 완료
 - 2020년 중앙동, 원인동, 학성동에 기본형 추가 설치하고, 면 6개소는 농어촌 특성화형(팀장 없이 팀원만 보강)으로 전환 예정임

[표3-3]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설치 유형

(2019.12.31. 기준)

읍면동	총인구 (명)	돌봄대상자 (노인)		케어안내창구 설치 유형		관할 종합사회 복지관
		대상자 수	비율(%)	복지부	원주시	
계	84,276	15,921	18.89			
문막읍	18,254	3,163	17.33	2유형 (보강)	2유형 (보강)	밥상공동체
원인동	5,435	1,134	20.86			명륜
흥업면	8,997	1,687	18.75			원주가톨릭
명륜1동	9,006	1,735	19.26			원주
신림면	3,663	1,345	36.72			
봉산동	8,556	1,997	23.34			
학성동	5,121	1,290	25.19			
태장2동	25,244	3,570	14.14			

■ 케어안내창구 기능

- 대상자 발굴 및 신청접수의 최초 접촉 창구이며, 통합돌봄 서비스를 종합 안내하고 관리
 - 돌봄 대상자에 대한 기초욕구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대행, 사후 관리
-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1차 사정 및 케어플랜 (초안)수립
 - 돌봄 욕구를 가진 상담자와 상담 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1차 사정 후 케어플랜 초안을 마련
- 케어회의 운영

- 관련 기관을 모집하고 케어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케어 안내 창구에서 작성한 케어플랜 초안을 보완
 - 케어매니지먼트 및 사후점검
- 적정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하며,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지 모니터링
 - ※ 케어매니지먼트는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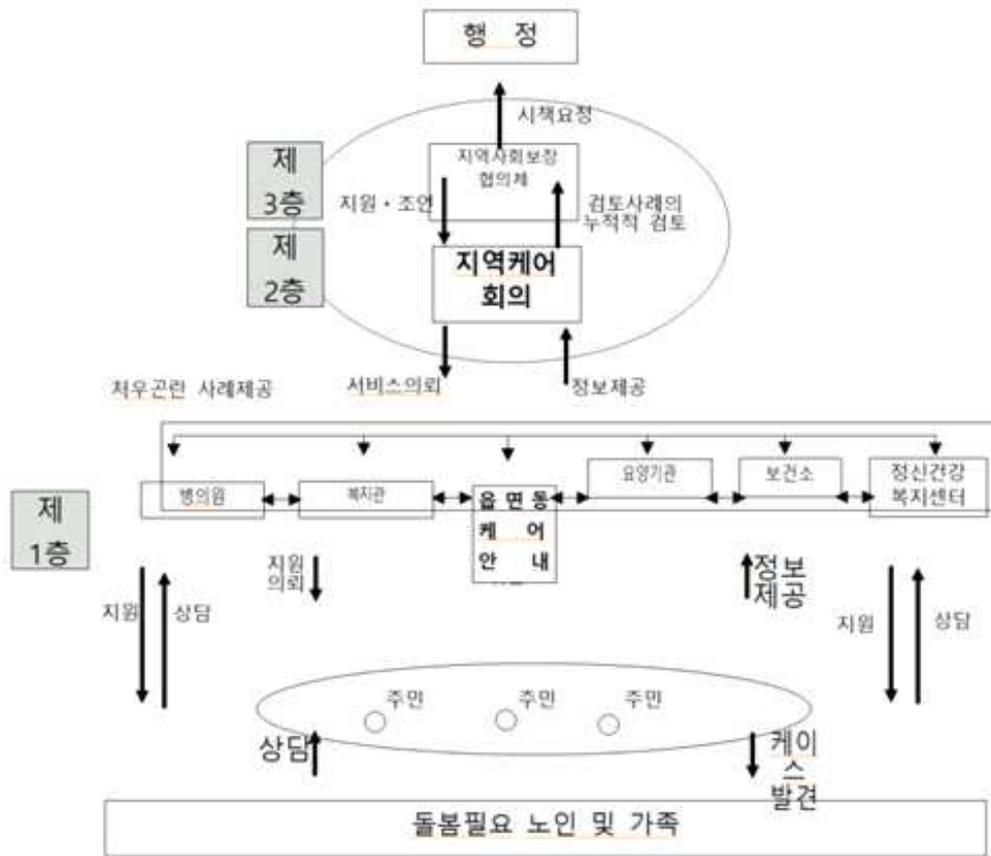
(3) 지역케어회의 구성 및 운영

■ 지역케어회의 구성 및 운영

- (기능) 읍면동 등에서 의뢰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시
- (구성) '사례'와 '사람'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 및 기관 참석
- (구성원)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행정 : 보건소 건강증진과, 해당 사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직원
 - 민간 : 노인관련 복지기관의 사례관리자, 해당사례 병원 지역연계팀, 장기요양 사업자, 필요시 OT, PT, 의사, 간호사, 관리영양사 등
 - 공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강원지역본부, LH주택공사강원지역 본부, 도시재생센터 등
- (운영) 복지정책과 융합서비스팀장(희망복지팀 전환 설치) 담당

■ 지역케어회의 운영 모형

[그림3-1] 지역케어회의 운영



- 시민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공동 부단장으로 구성함.
 - 민관협의체는 행정부서의 총괄을 비롯해 조직·인사, 서비스제공, 단체, 학계, 공공의 6개 분야를 망라해 구성하는 민·관·학의 연계 체제임. 특히 선도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와 총무과가 예산 및 조직·인사를 맡음.
- 민관협의체 운영
 - (민관협의체의 역할)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조언과 방향 제시
 - 선도사업 시행과정의 갈등과 마찰을 중재하고 조정함.
 - (운영주기)
 - 민관협의체 운영위원회는 선도사업 모니터링과 최종평가에 맞춰 반기별로 1회, 총 2회 개최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케어분과 회의와 연계하여 실무회의는 필요시 수시 진행 (주요 논의사항)

-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계획 수정, 선도사업 종료 후 최종 평가와 커뮤니티케어 이행조치 등
- 민관협의체의 간사역할은 복지정책과 선도사업 총괄팀이 구축되기 전 까지 지역복지팀에서 수행함

3. 정책대상별 선도사업 모델 구성

[표 3-4] 정책대상별 선도사업 모델 구성

비 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는 편안하고 행복한 원주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웃과 함께하는 원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②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돌봄 서비스 구현 ③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관·학 협력 케어 시스템 정착 			
모델	모델1 등급외 노인 (150명)	모델2 병원 퇴원 노인 (40명)	모델3 만성질환 노인 (80명)	모델4 돌봄사각 노인 (30명)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재가 노인 - 독립적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퇴원자 - 요양병원 에서 60일이상 입원중인 의료경도 이하 노인 ② 급성기 병원 퇴원 노인 - 골절, 관절 수술 치료 후 퇴원하는 노인 중 뇌혈관계 질환이력 있는 노인 ③ 장기요양등급 기각 판정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6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중 만성질환 2가지 이상의 노인 ② 근감소증 위험이 있는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사각 지대 위험노인 -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돌봄 사각 노인으로 선정된 자 - 장기요양등급자 이나 서비스가 필요 -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중 불필요한 입원·입소의 가능성이 있는 노인 - 치매가 있으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없는 노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거주 기간 연장 • 장기요양등급 내 진입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정착 및 정주환경 지원 •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관리로 합병증 발생 예방 •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위기 해소 • 지역 내 정주 환경 지원
성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습관 이행률 • 현재 장기요양 등급 유지률 • 서비스만족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입원을 감소 • ADL 향상 • 병원 생활 대비 만족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 관리율 • 다약제 복용률 •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사업 연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원 연계율 • 생활 만족도 향상

■ 정책대상별 지원사업

정책대상	<모델1> 등급외 노인 돌봄	<모델2> 탈 병원(시설) 노인 돌봄	<모델3> 만성질환 노인 돌봄	<모델4> 돌봄사각 노인돌봄		
분야	지원 사업				비고	
	모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14개 사업					
주거 (2개)	(1-1)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재정지원
	(1-2)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		○		○	재정지원
보건의료 (4개)	(2-1) 지역사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	○		○	건강보험 공단연계
	(2-2)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 사업		○			건강보험 공단연계
	(2-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	○	○	건강보험 공단연계
	(2-4) 건강반장사업 운영	○		○	○	재정지원
요양 돌봄 (8개)	(3-1)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사업	○	○	○	○	재정지원
	(3-2)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		○		복지부 연계
	(3-3)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	○	○	○	복지부 연계
	(3-4)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	○		○	복지부 연계
	(3-5) 확대형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	○	복지부 연계
	(3-6) 마을관리소 추가 개소 운영	○		○		민간협업
	(3-7) 커뮤니티케어센터 운영	○	○	○	○	재정지원
	(3-8) 안심생활지원(스마트홈서비스)	○	○		○	재정지원

[표 3-5] 정책대상별 지원사업

- * 재정지원 : 선도사업재정지원사업,
- 연계 : 복지부·건강보험공단연계사업,
- 민간협업 : 민간재원활용사업

제2장, 선도사업의 과제 및 제언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현장평가 및 과제

(1)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시 장점

- 탈시설화로 지역사회 일상생활 유지
 - 자가에서 안정적인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건강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계속 추적 및 제거와 유지

- AI기술과 IoT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일상생활 수준에서 추적하고 위험발생 요인 인지 후에는 신속한 치료와 대응으로 이용자의 건강상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위기사례에 유연하게 대응

-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를 블록단위로 선택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순차적 또는 일시에 제공할 수 있음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을 지양하고 이용자의 건강상태나 욕구에 기반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이용자의 욕구 탐색, 욕구변화에 공공과 민간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읍면동에서도 관심도를 높여 '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을 마련하고 공유함

-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수행기관 재량권 확대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및 포괄 서비스 제공 가능(반드시 문서화된 '발굴 및 의뢰'의 절차를 기반으로 하지 않더라도 기존 서비스 이용 중인 이용자도 여러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수혜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음)

- 파편화, 분절화 된 서비스를 통합하고 이용자의 명시적 욕구뿐만 아니라 잠재적 욕구를 미리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이용자가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찾기 위한 동기, 기관 방문, 상담 등의 노력을 절감시킬 수 있음. 즉 이용어르신은 식사지원은 ○○노인센터에, 집수리는 ○○복지관에, 방문건강진료는 ○○의원 또는 의료사협에 전화하는 것이 아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관(수행기관) 1곳의 담당자와 연락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조직 및 강화

- 각각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중심 서비스제공 환경에서(노인관련은 노인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의료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관계가 조직되고 확장됨으로써 지역네트워크 공고화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더불어 지역시민 간 조직화도 점증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원주시는 방문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건강관리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음. 또한 지역사회 내 방문재활이 가능한 의료기기제조업체와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자원 활용이 수월하였음

- 특히 의료복지 활성화의 경우 의료업종의 공통사항-우리 병/의원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각종의 적극적 노력들이 호객행위로 인식되어 상호 암묵적으로 금지하는-을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대의적 입장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유도하고, 의료사협에서도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요한 초석으로 보임

- 단편적, 분절적, 파편화된 서비스가 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해 통합되고 정제됨으로써 유사 중복서비스를 배제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함

- 공공과 민간, 행정과 실무, 기관과 사업 등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칸막이를 제거할 수 있어 현장과 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연계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결국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함

◦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및 지원요건 완화

- 과거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서비스 지원이 많았으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도입으로 조금 더 완화된 자격요건을 통하여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던 대상자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
- 별도의 심사창구를 설치하지 않고 기관 내부 사례회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자 추천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사업에 비하여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

(2)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진행 중의 어려움

◦ 네트워크 구축

-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원활한 회의 및 논의가 부족하였음. 그로 인하여 인적자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이는 블록화된 서비스를 이어붙이는 것 또는 순서를 바꾸는 것 이상의 수행기관의 집합적 심화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 기관 간 협력의 한계

- 사업계획 단계에서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기존 사업의 연계방안 및 협업체계를 고민해야 했으나 시간과 기회가 충분치 못하여 이에 대한 준비가 전무하였음. 그로 인해 기관 간 협력은 사업 진행 중에 병행하여 추진되어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발생
- 이용자의 일차 청구역할을 담당하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업초기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업홍보, 추진에 어려움 발생. 읍면동 담당자와의 소통이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협력체계를 구축한 복지관과의 사업네트워크를 중요시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원이 부족

◦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

- 시범사업으로서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이용자 간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추진 중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지 및 지원이 부족. 자칫 지역통합돌봄사업이 기존 복지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수평적 확장에 그칠 위험이 존재함

◦ 시범사업으로서의 한계

- 시범사업으로서 서비스 제공 기간의 불확정성이 발생하고 통합서비스 준비기간의 필요로 인하여 사업대상 모집에 어려움을 겪음
- 선도사업에 대한 수행기관들과의 사전 논의 등이 부재하였으며, 선도사업 시작 직전 몇

차례의 사업설명회만을 통한 안내가 있었음. 각 수행 기관별로 사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종료시점을 감안할 때 지원사업 종료, 향후 유지 방안에 대한 사업 계획수립에 어려움 발생. 종료시점이 7~8월로 하반기 자체사업으로 신규 반영하기 어려움. 또한 6월 경 신규로 의뢰 또는 발굴된 식사지원 이용자의 경우 6~7월 2개월만 지원하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노인이 시설입소 없이 살던 곳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관심과 돌봄이 필수적, 이를 위해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와 노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배치된 1명의 전담인력으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조직까지 수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 전담인력지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사례에 대한 인적교류가 일시에 단절되어 차후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과 서비스 제공 안정성에 대한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 기존 전달체계에서 발생한 병원, 내방환자, 처방전 등 관성적 의료전달체계로 인하여 단기간에 변화 및 혁신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3)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 시 구현해야 할 점

- 민·관·학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색에 적합한 모델 구축

- 노인의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으나 각 지역의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세부적 돌봄체계를 민·관·학이 협력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참여기관의 주요 서비스 특화

- 일반 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각 기관에 따라 개발하여 특성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효과와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나아가 지역 범위의 차등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용자 중심의 다직종 연계 지역케어회의 활성화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이용자를 다직종(공공, 복지, 정신보건, 법률 등)의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이용자의 욕구를 평가하고 통합돌봄계획 및 서비스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케어회의 활성화가 통합돌봄의 성공요인. 또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환류, 점검을 통해 심층적인 통합접근이 필요

- 네트워크 촉진 및 강화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연계, 논의하고자 하는 활성화 및 강화 노력이 필요함. 시범사업 기간 중 건강보험공단 등 개별 사업주체들이 업무과정에서 발굴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었음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체계구축을 통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에

게 욕구 반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혁신 도시 내에 위치한 공기업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행기관 내부에서도 각 부서별 서비스 지원 계획과 관리, 점검 등 이용자의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활발한 의견교환과 논의가 필요하며, 수행기관 내부뿐 아니라 지역의 개인이 운영 중인 재가지원센터 등과도 활발한 서비스 연계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돌봄'의 개념을 지역에 확대해야 함

- 제공 서비스의 물리적, 화학적 융합

- 수행기관 지원 서비스를 양적으로 결합하여 순차적,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 욕구를 중심으로 필요 서비스를 각 서비스 내에서 선택 결합하여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융합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상충되는 법과 제도 정비

- 산재해 있거나 상충되는 법률을 정비하고 행정, 기관, 사업간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일반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컨트롤 타워 설치

- 공공과 수행기관 및 지역주민의 참여로 사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해당 기구는 사업의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을 담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부여함. 또한 서비스 환류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공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인력 양성 및 케어매니지먼트를 수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여러 방면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의 관리는 전문적인 인력양성 및 케어매니지먼트에 의해 보다 심층적인 전문화된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음.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4)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필요지원 정책

- 이용자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기존의 이용자 의뢰방식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됨. 이용자에 대한 정보, 서비스 의뢰 및 진행 과정, 절차 등에 대하여 수행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한 번에 공유 및 관리 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필요

- 건강보험공단에 이용자 의뢰를 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각 수행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행정적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병원 퇴원 후 노인의 지역사회복귀 및 안정화된 정착을 위해 환자 입원 초기부터 퇴원계획 수립, 지역의 자원과 연계 지원이 가능한 정책 마련 필요

- 공공 및 민간의 조직체계 개편

- 커뮤니케이션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기존 서비스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 및 이용자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용자의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계획, 관리,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조직의 개편, 특히 공공의 조직개편/신설이 필요함. 정보의 원활한 공유, 재정 확보, 유연한 서비스 제공 등은 여러 부서 간 협조와 권한이 필요하며, 개편/신설된 조직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이를 통합하여 행정 및 실무를 수행할 때 불필요한 비용과 분절, 파편화된 서비스를 지양할 수 있음
- 지역별로 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종합재가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이전 중간단계의 개념에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자연스럽게 업무가 이관되어 지역에 돌봄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업기간 및 방향성이 지원되어야 함
- 지역의 종합재가센터와의 사업성과에 대한 공유, 향후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함
- 읍면동 단위 공무원의 적극적 홍보와 개입 : 사업 초기 현장 공무원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으로 원활한 이용자 신청, 접수 및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함
- 주무관청 내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원과 수행 기관과 주무관청 간의 효율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
- 여러 기관이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이용자의 욕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본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목적이므로 이를 전담할 조직이 반드시 필요함

◦ 인력 양성

- 기존 활동가의 경험과 이해가 폭넓게 요구되는 바, 전문적인 통합돌봄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에 대한 이해, 기관 간 협력/연계체계,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 재정마련

- 이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하고 이는 서비스 제공과 전담자에게도 중요한 측면이 있음. 특히 전담자가 업무에 집중하여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고용의 확보가 필요

- 수행기관과 유관기관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반적인 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를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선도사업을 통한 기초지자체의 역량 발전과 모델개발

(1) 시설화를 촉진하는 돌봄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활동보조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장기요양보험)등의 다양한

돌봄 제도를 발전시켜옴.

- 이전에는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도 활발해지고, 가구구조가 1, 2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짐.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기본적으로 시설화를 촉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복지국가들은 이미 7~80년대를 거치면서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를 원칙적으로 채택하여 이를 위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고,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실현하려고 함
-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돌봄제도는 일정한 시점에서 벽이 존재함⁵⁾.

(2) 시설화를 촉진시키는 제도는 건드리지 않는 통합돌봄

- 선도사업의 추진 과제 및 로드맵 등의 운영을 보면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제공기반을 구축하고,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공통제공기반 : 기초지자체 내에 통합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
 - 기초지자체 본청에 통합돌봄 전담 추진조직인 총괄추진단을 구성
 - 읍면동, 복지관, 보건소 등 일선 기관에는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통합돌봄 창구(원주:케어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신청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도록 함
 - 지역에 일상생활 지원, 주거, 보건의료, 요양, 정신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운영해서 이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통합돌봄을 시행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통제공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돌봄 관련 서비스 제도를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그렇지 못하다면 통합돌봄은 기존의 제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별도의 사업이 됨⁶⁾
- 핵심제도가 빠지다 보니 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시설에 들어갈 위험에 있는 사람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이 적은 대상자에게 통합돌봄 사

5)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외상상태에 해당하는 1등급조차 하루 4시간이 최대. 그것도 하루에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다 사용해야 함. 시설입소의 선택 앞에 있는 노인이 하루 딱 한 번 4시간 서비스로 집에서 살 수 없음. 돌보는 가족이 있어도 큰 도움이 되기 보다는 그저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 하지만 시설에 갈 경우 그 자체가 24시간 돌봄이 됨. 결국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가족의 희생과 시설입소 딱 두가지 선택지를 강요받게 됨. 가족구조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시설 이외의 선택은 쉽지 않음

6) 16개 선도사업 지역 중에 13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노인대상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를 보면 여전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돌아가는 제도임. 일부 3,4등급 대상자가 통합돌봄 대상으로 포함되는 정도임.

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⁷⁾

◦ 기존 돌봄제도와 통합돌봄 사업이 별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직 사업 초기이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모형을 만들기 위한 선도사업이라면 제도의 틀을 바꾸어 보는 시도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이는 전체 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선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됨

(3) 선도사업을 통한 기초지자체 역량발전과 모델개발

◦ 돌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적지만 지역사회에 책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초 지자체가 통합돌봄에서 해야 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경험의 축적과 다양한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일본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협업적 토대 위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에서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지원도 복지혼합의 양상을 보임⁸⁾.

◦ 2000년 일본의 개호보험이 시작된 후 장기요양서비스와 인력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했으며, 고령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재원 부담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됨.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와 유사함

◦ 일본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앙정부가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지원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추진되어 왔으며, 시민들의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보건·복지서비스제도가 부분적으로 통합되거나 연계되어 있음

◦ ‘케어플랜’과 ‘케어매니지먼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의 출발점으로 고려할 수 있음. 서비스 욕구를 사정 및 상담함으로써 이어지는 서비스 신청 및 지급결정, 케어플랜 수립,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제공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음⁹⁾

◦ 지역사회의 주민조직과 그 역할강화, 법률·제정적 정비, 보건시스템의 확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향해야 함

◦ 원주는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주민조직운동이 활발한 곳이며, 그들은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있음

7) 현재 통합돌봄 대상자를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지역복귀자(유형1), 단기입원 후 지역복귀자(유형2), 75세 도래자 및 고위험군 선제개입 유형(유형3), 주로 건강기능 유지 필요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예방효과 등) 실증사업 유형(유형5), 주로 등급외 판정자나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지역 자체 설정 유형(유형5-8)로 구분. 이 중 상대적으로 욕구수준이 높은 유형 1은 전체 대상의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낮은 욕구 대상이 대부분을 차지.

8) 재원을 중앙,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케어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추진되었기 때문.

9) 일본에서는 서비스 상담, 신청 및 지급결정은 시정촌(기초지자체), 케어플랜 수립은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담당.

◦ [원주형]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자원들을 엮어내는 작업이 필요함

◦ 원주에는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관계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수많은 인적·물적 자원들과의 협업과 연대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진정한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됨.

2. 주거약자 지원사업 “어울림 커뮤니티” -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본 사업은 원주 원도심 사회복지의 중심기관인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어울림 커뮤니티’ 사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됨. ‘어울림 커뮤니티’는 201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획 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진행. 이 사업은 주거 약자를 지원하며 주거의 안정과 자립,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이 경험적 근거들이 사례관리 체계에 반영되어 유지되어 기능을 이어가고 있음.

본 보고서는 2019~2022년 3년간의 실적과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성과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연결성을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고민하고자 함.

- 목 차 -

1. 서론
 - 가. 지원주택 모델화 추진 배경
 - 나.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어울림 커뮤니티 사업의 추진배경
 - 다. 분석 목적

 2. 사업 성과와 한계
 - 가. 사업개요
 - 나. 주요실적 및 성과
 - 다. 사업의 의의
 - 라. 사업의 한계 및 과제

 3.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어울림 커뮤니티 사업 연계 가능성
 - 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내용
 - 나. 연계 가능성
 - 다. 구체적 연계방안

 4. 결론 및 제언
-

1. 서론

가. 지원주택 모델화 추진 배경

‘어울림 커뮤니티’ 사업은 지원주택 (Supportive Housing) 모델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취약 계층, 특히 노숙인 및 주거약자들을 지원. 단순히 주거 제공을 넘어 주거우선(Housing First) 원칙과 통합적 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

추진배경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¹⁰⁾

첫째는 주거우선의 원칙. 서구의 정책을 보면 노숙 문제를 단순히 주택 제공이 아닌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결합해야 함을 강조. 이는 노숙 상태가 길어질수록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둘째는 지원주택의 필요성으로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 이를 위해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는 생태계 조성 및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

셋째는 주거우선 지원주택 정책이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가 필요. 노숙인을 비롯한 주거약자 지원체계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며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실천 간 연계성이 미흡. 공공주택 확충,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도적 안정성 확보되어야 함.

넷째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원주택 모델은 상호보완적임. 지원주택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노인, 장애인, 노숙인을 위한 지역 밀착형 지원 서비스가 필수요소임.

나.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어울림 커뮤니티 사업의 추진 배경

201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원주택 모델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기획사업을 추진 공모를 진행. 이 사업은 주거약자, 특히 노숙인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자립 지원을 목표. 주요성과로 주거 안정성, 사회적 지지 향상, 생활만족도 증가가 있었고 ADL/IADL(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 및 개선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¹¹⁾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 15개 수행기관 중 선정되었고 ‘어울림 커뮤니티’ 사업명으로 3년간 사업을 수행.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맞춤형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심리적, 사회적 안정 등 통합적 지원. 주거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

10)<https://www.slideshare.net/slideshow/5-1-251727876/251727876>

11)<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lId=ART002932742>

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이에 ‘어울림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고 주거의 안정성 확보와 정착,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다. 분석 목적

본 보고서는 3년간 수행된 사업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상호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2. 사업 성과와 한계

가. 사업개요

사업명: 주거약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지원주택 모델화 사업 “어울림 커뮤니티”

수행기관: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대상: 주거약자 및 주변참여자

사업기간:

1차년도: 2019.06.01 ~ 2020.05.31

2차년도: 2020.06.01 ~ 2021.05.31

3차년도: 2021.06.01 ~ 2022.05.31

총 지원액: 각 연도별 1억 (3년간 3억)

[표 3-6] 연계기관 현황 및 역할

기관	역할
원주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의뢰 - 통합사례회의 진행
LH공공주택 및 주거복지재단	- 공공임대주택 및 긴급주거지원 주택 연계 - 주거지원 제도 및 관련 정보 제공
원주시 사회보장협의체	- 통합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논의
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방문간호, 건강관리 상담 및 의료 지원 - 세브란스 병원: 의료비 지원, 진료 연계 - 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 상담 및 치료 동행 - 밝음의원 : 진료연계, 방문간호
중독관리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 알코올 및 약물 의존 상담 및 치료 연계 - 자살 위기 대상자 긴급 개입 및 사례관리
지역 복지시설	- 노숙인 센터, 다시서는집: 단기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 - 재가노인복지센터: 고령자 돌봄 서비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민간 단체 및 협동조합	-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금융 컨설팅, 신용 회복 프로그램 제공 - 동네지킴이: 정서적 지지, 주거지 관찰 및 긴급 상황 대응
기관내부 사업연계	- 에너지지원센터 : 난방비 및 전기요금 등 긴급 지원 제공 - 지역사회보호사업 : 생활 필수품 및 자원 연계 - 기부은행 : 돌봄봉사자 연계

나. 주요실적

1) 참여자 수 및 구성

[표 3-7] 참여자 수 및 구성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참여자 수	핵심 22명, 주변 참여자 다수	핵심 30명, 주변 참여자 다수	핵심 28명, 주변 참여자 다수
주요 대상	노숙인, 노인, 장애인	노숙인, 노숙 위험군, 주거 취약층	장애인, 노숙인, 주거 취약층
동네지킴이 발굴	7명 발굴	8명 발굴	11명 발굴

2) 주요 사업 실적

[표 3-8] 주요 사업 실적

서비스 항목	1차년도 실적	2차년도 실적	3차년도 실적
주택 개보수	10명(10회)	10명(11회)	6명(7회)
주거비 지원	16명(103회)	29명(201회)	16명(101회)
건강밥상 제공	19명(445회)	30명(675회)	15명(405회)
의료·난방비 지원	의료: 11명(46회)	의료: 15명(46회)	15명(37회)
난방비 지원	10명(14회)	10명(14회)	-
정서지지 프로그램	관계형성(종이접기) 7회, 24명 참여	환경지킴이 프로그램 23회, 10명 참여	비대면 관계형성 프로그램 24회
동네지킴이 활동	활동 414건	활동 365건	활동 335건

3) 정량적 성과

[표 3-9] 정량적 성과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회적 지지 점수	22.6 → 27.8 증가	22.6 → 26.0 증가	24.3 → 28.8 증가
삶의 만족도 점수	21.3 → 30.2 증가	25.5 → 30.9 증가	25.5 → 32.2 증가
IADL (일상생활수행 능력)	14.0 → 13.0 감소(소폭)	11.1 → 10.9 감소(소폭)	10.86 → 10.96 증가
탈락 및 퇴거율	탈락자 없음 퇴거자 없음	탈락 2명(사망/자발적 거부), 퇴거자 없음	탈락자 없음, 퇴거자 없음

4) 주요 성과

○ 주택 개보수 및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성 강화
어울림커뮤니티 사업은 참여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 안정성을 확보. 이는 주거약자 지원사업의 주거 안정화 목표를 구현하였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갈거리은행에 금융상담과 목돈마련의 기반이 됨. 주거지 연계는 LH공공주택, 민간 주택, 지역 내 빈집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고 주거약자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고 직접 연결.

○ 정서적 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 실현
동네지킴이 활동 및 주민참여를 중요시 함. 돌봄의 주체를 공식적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강화. 노숙 및 노숙 위험군인 주거 약자를 지역사회와 연계를 구체화한 사례이면 당사자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망을 형성한데 의의가 큼. 관계형성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 해소. 정서적 관계망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과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 모임을 운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관계 단절을 예방하려는 다양한 시도.

○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체계 및 네트워크 형성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주거약자 지원 사업이 강조한 주거와 복지의 통합적 개입 모델을 구체화. 주거지원뿐 아니라 건강밥상 및 긴급지원, 의료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당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 이 과정에서 지역 내 기관 간 협력하였다.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의 경험적 근거를 마련.

다. 사업의 의의

1) 주거복지 모델의 구체적 실현

어울림커뮤니티 사업은 주거약자 지원사업의 이론적 기반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하였으며 지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

2) 돌봄의 지역사회 내 정착

주거를 안정화하고, 주민이 직접 돌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복지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제시.

3) 취약계층 자립 지원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주거약자 지원사업의 장기적 목표를 실현.

라. 사업의 한계 및 과제

1) 지속 가능한 돌봄 네트워크 강화

동네지킴이의 역량 강화와 활동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개발이 필요.

2)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거 취약층 외에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60세 미만, 비노숙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함.

3) 사후관리 체계 마련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자의 주거 안정성과 자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체계 필요.

4) 성과 확산 및 정책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복지 모델로 확산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요구.

3.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어울림 커뮤니티 사업 연계 가능성

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내용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사업은 어르신,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시설 중심에서 지역 기반 돌봄 체계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핵심 내용으로는

○ 주거 및 돌봄 서비스 통합:

- 케어안심주택 확대(2026년까지 4만 호 공급).
- 집수리 및 낙상 예방 등 주거 환경 개선.
- 재가 의료와 방문 간호 활성화.

○ 지역사회 중심 모델:

-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기획 및 시행.
- 읍면동 단위의 케어안내창구와 통합지원센터 설치로 접근성 강화.

○ 법적 기반:

- 2026년까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정비.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기존 복지 체계와의 연계 강화.

○ 목표:

- 노인 및 취약계층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
- 의료비 및 돌봄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 확보.

나. 연계 가능성

어울림커뮤니티 사업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사업과 연결 가능성이 높음. 두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기반 복지를 구축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음. 특히, 어울림커뮤니티 사업에서 실행한 다양한 실천 모델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1) 정책 목표의 일치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익숙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설 입소를 대체할 지역 기반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 어울림커뮤니티 사업 역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거주 환경과 자립을 돕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돌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 공동적으로 주거 안정성, 돌봄 체계 형성, 지역사회 기반으로 돌봄 제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음.

2) 기존 어울림커뮤니티 사업의 성공 요소 활용

○ 주거 안정성 확보 경험

어울림커뮤니티 사업은 주택 개보수, 임대료 지원, 공공 및 민간 주거 연계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성을 높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 주거 안정은 돌봄 제공의 기본 조건으로, 어울림커뮤니티의 성공 사례를 정책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주민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

동네지킴이 활동은 지역 주민을 돌봄의 주체로 포함하며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도 돌봄공동체 형성을 강조하므로, 어울림커뮤니티 사업에서 구축한 모델이 중요한 사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어울림커뮤니티 사업은 LH공공주택,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 문제 해결을 성공적으로 이룸.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에서도 민관 협력 체계가 필수적 이므로, 어울림커뮤니티의 협력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것임.

○ 개별화된 사례관리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행하며, 주거, 건강, 정서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의 핵심인 개별화된 통합서비스 설계에 어울림커뮤니티의 경험이 기여할 수 있음.

다. 구체적 연계 방안

1) 주거 안정 지원 강화

○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 연계:

어울림커뮤니티의 LH공공주택, 민간 주택 연계 경험을 활용 주거 지원을 확대·운영

○ 주거지원 프로그램 통합:

임대료 지원, 주택 개보수 등의 실천 모델을 통합돌봄 사업 내 주거지원 영역에 포함

2) 돌봄공동체 활성화

○ 동네지킴이 프로그램의 확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서도 주민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이 중요. 어울림커뮤니티의 동네지킴이 활동은 성공적인 주민 주도 돌봄 모델로 확장 가능성이 높음.

○ 관계형성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커뮤니티의 종이접기, 환경지킴이, 비대면 모임 등의 프로그램은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목표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적용할 수 있음.

3) 통합적 서비스 설계

○ 사례관리 강화:

어울림커뮤니티에서 실행된 개별 사례관리 방식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핵심인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에 적용.

○ 다학제적 접근: 어울림커뮤니티에서 구축된 의료, 복지, 행정기관의 협력 체계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내 통합적 사례회의 및 서비스 연계사업과 일치함.

4) 지속 가능성 확보

○비공식적 자원의 활용:

동네지킴이와 같은 비공식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사후관리 체계 구축:

어울림커뮤니티의 사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

4. 소결론 및 제언

어울림커뮤니티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거주 환경과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의 가능성을 입증한 성공적인 사례. 특히, 동네지킴이 활동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는 주민 주도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현한 점에서 좋은 모델이 됨.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 품위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지역사회의 유의미한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장시켜 돌봄 체계로 구축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주거 중심의 돌봄 체계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함.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새로운 대상층의 포괄적 지원, 그리고 돌봄통합지원법과 같은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결국,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

제4장

통합돌봄 실천사례(Ⅱ)

1.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방문진료, 건강반장
2. 원주한살림생협 : 주거복지
3.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 원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1.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방문진료, 건강반장

가. 건강반장

1) 개요

○ “주민참여형 돌봄 모델”로 주민이 주민을 돌보기 위한 훈련을 통해 말벗, 안부확인 등 기본적인 주민 돌봄 활동과 더불어 건강관리 및 보건프로그램을 접목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주민주도 돌봄을 실천하는 마을 건강활동가

- 노인일자리 사업 “노노케어”와 연계한 사업으로 기존 활동(말벗, 안부확인등)에 강원의료사협의 보건예방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의 역량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마을의 의료복지취약계층 돌봄 및 발굴·연계 활동

○ 활동내용

- 치매 및 질환 예방활동(그림활동, 건강·예방 체조 등), 혈압관리, 의료복지 취약대상자 발굴 및 연계(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 사업기간: 2015년~현재

2) 사업 성과

- 커뮤니티케어에서의 핵심인 지역, 마을, 주민이 주체자로서의 참여를 통해 마을안에서의 돌봄 일상화와 지속가능한 모델 실현 가능
- 지역사회 내 일상적 예방의료교육 및 주민 돌봄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확충 및 건강공동체 실현

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1) 원주형 방문구강 시범사업

- 시작 배경 : 14세 발달장애인 치아 치료 거부 2개월을 진통소염제로 버텨야했던 사례를 통해 시작. 무엇보다 예방 사업이 중요
 -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은 21.1%로 비장애인 인구 30.3%보다 9.2% 낮고, 중증장애인 (17.3%)은 비장애인 인구에 비해 13%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2019~2020))
 - 높은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전신 마취 장비, 장애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의료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의 부족 등을 원인
 - 강원의료사협에서 시작되어 2020년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업 진행, 추후 타지

역으로 확장

2) 원주형 방문재활 시범사업

- 시작배경: 최근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의 욕구가 있는 부분으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 방문재활 서비스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예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하지만 원주권 내에서는 구체적인 법적 기반과 공적 서비스 부재로 인한 자원 및 서비스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재활 운동 및 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방문재활 시범사업 진행 2019년부터 사업 진행
- 통증 관리와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에 큰 호응을 보였고 가정환경 수정, 재활 치료 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도 충족된 사업으로 평가됨.
- 사업의 효과성 입증되어 원주의료원 필수보건의료 노인 및 장애인 방문재활 사업으로 확대됨

3)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표 4-1] 제도권내 재택의료 사업

	가정간호센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자격	집에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요구되는 모든 연령층	·1-3급 중증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 *시설 거주 장애인은 제외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
재원	건강보험재정	건강보험재정	건강보험재정	혼합수가(건강보험재정+장기요양보험재정)
서비스 제공 내용	가정간호의뢰서에 따라 가능 (주사, 투약,영양관리, 배뇨관리등)	건강주치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에 따라 방문간호 처방 (주사,투약,영양관리, 배뇨관리등)	약 처방 및 주사, 소견서 작성	대상자의 전반적 상태와 욕구에 대해 포괄적 평가 결과에 따른 케어플랜 및 서비스 제공
현황	5명 가정전문간호사 (원주,횡성,강릉)		방문진료:75건내외 방문간호:120건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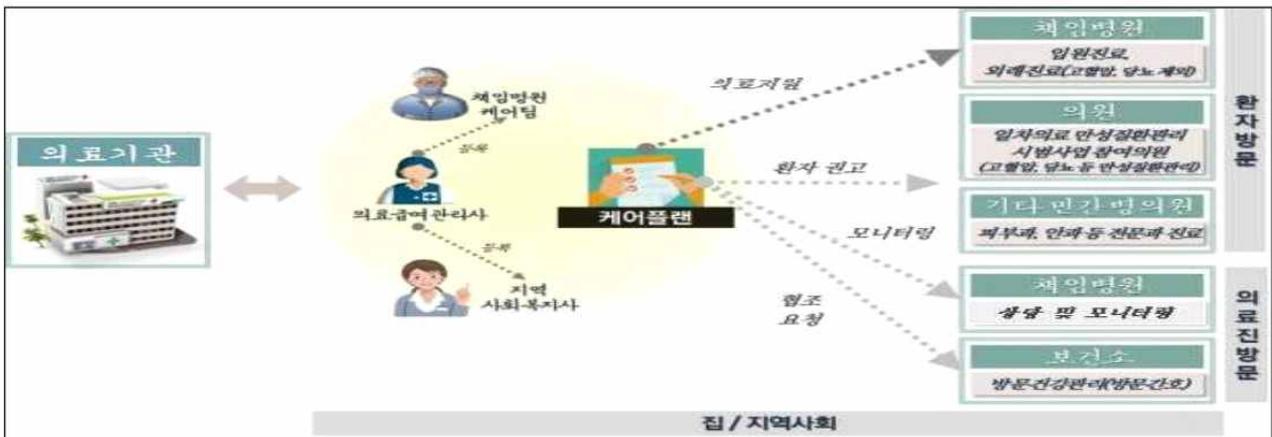
[표 4-2] 비제도권내 재택의료 및 협력사업

	공동방문간호 스테이션	농촌건강 지원사업	기타 건강 돌봄 사업
참여자격	사회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NH투자증권임직원 기탁 금 (사회공동모금회)	자활센터 참여자 장애인 작업장
서비스 제공 내용	대리처방 받고 있는 의원 환자	원주 농촌 및 시내 경계 지역 (사회취약계층, 거동 불편한 자, 건강보험 사 각지대에 놓인자	건강검진 및 교육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강원도 유일 진료참여 기관)

- 정의: 병원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그림4-1] 재가 의료급여 의료지원 체계도



○ 자활근로 참여자 방문건강 상담

- 지역 자활 센터에 근무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 구원, 차상위, 시설 수급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간호사가 없음
- 건강 자립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직군임에도 관리 받지 못함
- 개별 환자만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고 위험군, 복합질병이나 특정 환자 집단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건강관리팀 구성

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례

1) 진료 및 간호의 서비스 접근과 요구도 변화



[그림4-2] 포괄적 평가의 의미

○ 환자중심성 서비스로 의료 제공 및 생존 기간을 높이는 것이 중재목표

- 기존 진료에선 환자의 질병 중심으로 진단과 처방, 앞으로 많은 치료진들이 포괄적으로 대상자의 능력을 평가, 그로 인한 중재 제공
- 후기고령자의 임상양상(clinical manifestation)은 일반 인구와 비교하여 상당히 다른 특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대 환자들에게 내려지는 임상적 의사결정은 질병에 대한 진단(diagnosis)을 근거로 이루어짐
- 이때 생존 기간을 높이는 것이 모든 치료의 최우선적인 중재목표
- 노인환자는 **질병중심 접근법(disease-specific approach)**이 부적절

○ 케어매니저의 역할

- 노인환자에게 보이는 복잡한 문제를 사정하고 통합 컨트롤 타워가 될 역할이 중요시됨.
- 강원의료사협은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간호사가 주도적 수행

[그림4-3] 케어매니저의 직무

1. 환자의 건강,사회,경제,환경등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사정

- 질병 및 간호처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돌봄 부재, 독거유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사회보장급여등을 포괄해서 파악
- 서비스 지원 상황 파악 및 자원 연계 서비스 현황 확인
- 국내 만성질환자들은 처방약 이외에 비처방약, 건강보조식품 등의 섭취 가능성도 높아 약물 간 상호작용 모니터링은 간호사가 할 중요한 업무임

2. 케어플랜 작성

- 질병 중심이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고 증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 플랜 작성
- 작성된 케어플랜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공유하여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동기부여
-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력과 유연성이 필요함

3. 환자관리

- 케어플랜에 따라 환자와 관련된 모든 치료진들에게 리콜-리마인드 하기
(단순히 일정만 리마인드 하는게 아니라 환자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확인하도록 수행)
- 친밀감 형성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함

4. 환자 교류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 현존 하고 있는 사업 및 기록 및 입력해야하는 행정시스템 숙지
-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연계해야하며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 연계하는 과정에 대해 책임감 있게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기

5. 지역사회 보건,복지기관에 환자를 연계하기

- 보건-복지, 병원-의원, 공공-민간, 환자+가족+요양보호사+관계된 모든 치료진을 연계, 통합, 조정하기
- 한번 연계된 네트워크는 인적 자원임
- 기관대 기관의 신뢰는 한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감 있게 타기관에 연계하고 관계 맺기

6. 월간회의 및 사례회의 기록

- 다른 전문 인력들의 간접 경험을 통해 얻어지고 수정되는 것들이 많으며 환자 관리를 위한 회의는 필수적임
- 환자중심 다학제 접근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 확인, 다학제 팀 접근에 대한 교육과 사례 공유가 필수적으로 제공

7. 다학제 팀 소통 및 능력 향상시키기

- 다학제간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쉽지않기에 중간 다리 역할필요
- 다학제 미팅이 반복되면서 각 직종 간 역할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지고 서로 공유할 부분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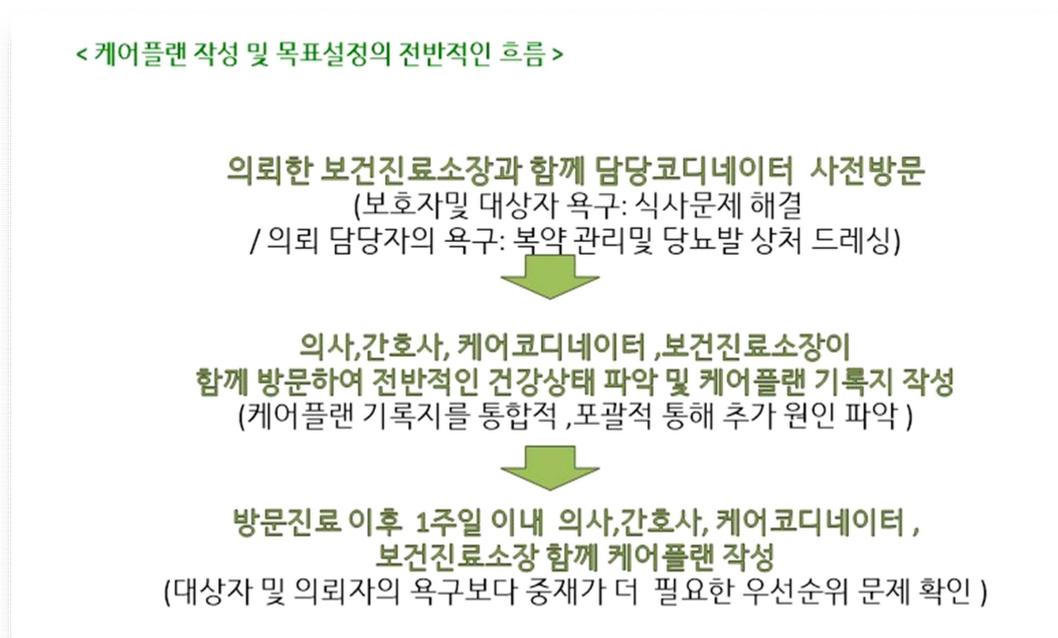
8. 직접간호 실무능력 함양과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 함양

- 환자의 건강행위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
- 각 기관에 맞게 치료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 실제 사례

<p><대상자> 성별 : 남, 연령 : 60대, 경제적 상황 : 의료급여 1종 주소 : 정신질환과 관련된 행동 문제, 당뇨발 관리, 혈당 관리 현병력 : 조현병(20년 전)/당뇨 과거력 : 정신과 여러 차례 입퇴원 / 부친 폭행 이력 있음 /다리 골절 (2개월 전) 가족력 : 부친(당뇨) 생활습관 및 생활 어려움 : 정신질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및 사회성 부족, 복약 상태 좋지 않을시 공격적인 행동 보임. 돌봄이 필요한 부친과 동거중이며 가사 일을 전담했던 모친 얼마 전 사망,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최근 행동문제(공격적, 배회, 현실감각 저하 등)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 없음 보건진료소장님 의뢰</p> <p><대상자 부친> 성별 : 남, 연령 : 90대, 경제적 상황 : 의료급여 1종 주소 : 혈당 관리 및 어지럼증, 복약관리 현병력 : 당뇨, 고혈압 과거력 : 6개월 전 낙상으로 인한 압박골절 생활습관 및 생활 어려움 : 정신질환 장애아들과 동거 가사 일을 전담했던 부인 얼마 전 사망으로 일상 생활(식사, 위생 등의 돌봄)유지 안 됨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 없음</p>

[그림4-4] 사례적용 흐름도



- 사전 방문, 전반적인 상황 파악
- 케어플랜 작성은 되도록 1주일 이내
- 우선적 중재,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그림4-5] 구체적 중재를 통한 지역자원 및 치료진 연계



- 방문의료팀간의 역할이 분담,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간호사가 통합 컨트롤 타워
- 총 사례 관리기간은 1년
- 현존하고 있는 방문의료 및 돌봄 서비스는 종류는 많지만 분절되어 있어 오히려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의료 및 돌봄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됨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사례관리가 연속적으로 필요하고 팀원 간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해줄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
- 단순히 자원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서비스 개입이 잘 작동되는지를 모니터링 역할 중요

2. 원주한살림생협

가. 주거복지 지원사업

- 2022년부터 사회적기업 노나메기와 원주한살림생협은 ‘생활기술학교’를 운용.
 - 6회에 걸쳐 목구조제작과 전동공구사용법, 주택내선설비, 타일, 도배, 위생설비 등 5개 과정의 실무과정을 60여 명의 조합원, 시민이 수료.
 - 수료생들은 배움을 넘어 기능의 숙련과정을 익히고 배움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주거생활서비스돌봄’을 수행함.
 - 2023년에는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20여 가구를 대상으로 LED전등 교체, 스위치 교체, 싱크대 및 세면기수도 교체, 깨진 유리와 방충망도 교체 사업을 시행.
 - 그 외에도 관절이 안 좋아 높은 화장실 문턱을 넘기 힘들고 외출이 어려운 거동불편 가정에 디딤판을 만들어 양변기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활동 지원함.

3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가. 봉산동 할머니집

- 봉산동 할머니집은 사회복지시설 갈거리사랑촌과 의료기관인 부부의원을 운영하던 곽병은 의사가 주거와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약 20년 전에 시작됨
-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임대료 때문에 허리와 다리 관절이 불편해서 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도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어르신들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원주시 봉산동에 작은 구옥을 매입하여 5-6명의 어르신이 기존 임대료의 절반이하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절약된 임대료로 인해 어르신들의 생활은 개선이 되었고, 함께 살면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게 됨. 이후 구옥에 대한 시설 보강과 생활가전 제품 등의 후원 등으로 점차 생활 여건이 개선됨.
- 2020년부터 시작된 봉산동 우물시장 동네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할머니집은 공공형 순환주택과 신규 원룸 형태로 재건축을 하게 됨. 이후 4명의 어르신이 더 쾌적한 공간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공공형 순환주택에는 6명의 정원으로 주거 파손이나 손실 등을 입은 긴급 주거 취약계층이 입소를 하게 됨.

나. 원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위탁 및 운영

- 2020년 원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결과로 통합돌봄지원조례가 제정됨.
- 또한, 봉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할머니집의 재건축뿐만 아니라, 생명모심 커뮤니티센터가 신축됨.
- 이 생명모심 커뮤니티센터를 원주시가 통합돌봄센터로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도록 함. 이에 지역사회에서 봉산동 할머니집을 운영하던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돌봄센터를 2023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
- 통합돌봄센터는 모법인의 주요 사업인 금융복지상담과 채무 조정, 가계 재무 상담, 마이크로 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주거 기반 통합돌봄을 만들어가고 있음.
- 2024년에는 의료사협과 연계하여 건강 상담 및 재활 교육 등을 진행함. 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과는 인지 예방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주요결과 및 시사점
2. 원주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

1. 주요결과 및 시사점

가. 왜 돌봄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인가

(1) 노동과 복지 융합을 지향

○ 한국 사회적경제, 취약계층에 초점

-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는 고용,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깊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2007년)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됨
-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전에도 생산공동체 운동을 시작으로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이 진행
 - 1996년 자활 시범사업은 특별취로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로의 발전을 목표로 공공, 시장영역 외에 제3섹터(사회적경제와 비영리)에서 유용한 일자리 창출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자활사업은 공공부조의 형태로 제도화 되었으며, 자활사업의 제도화는 사회적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자활사업 경험을 통해 적지 않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출했는데, 자활사업이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에 필요한 인적 물적 토대를 제공
 - 자활공동체 사업은 마이크로크레딧의 발전 기반이 되었고 사회적 고용, 사회적기업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돌봄(돌봄)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은 사회적기업의 핵심 목적

- 개인과 가족 등 사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서비스 욕구 증대, 돌봄 기능을 담당하던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거치면서 공적 개입이 불가피해짐
- 동시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제공 능력이 확대되면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경제 조직도 늘어남
-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맥을 같이하며, 사회서비스 분야가 갖는 일자리 창출 역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

○ 바우처 제도

- 한국의 돌봄 서비스의 경우 2004년경부터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돌봄 노동에 관심을 갖고 구체화되기 시작해 현재는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
 - 보육, 교육, 건강, 노인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가 대부분 돌봄활동이며 돌봄은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돌봄을 권리로 인식
 - 간병을 위한 활동을 노동으로 자리매김하여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복지운동 영역이나 여성운동 영역에서 핵심적인 관심사임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복지정책 강화뿐 아니라 여성 노동 참여율 저조 문제, 출산율 감소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근로연령세대 가구의

빈곤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도 함

- 2008년 사회서비스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이 확대되며,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제공주체로 등장
-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이용자를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개별화된 소비자로 간주
- 시민의 조직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미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형태의 조직체계 형태
- 집단 차원의 시민참여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 주체로서 실질적인 경험을 집단 내에서 공유

○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공동관계 성립이 중요

- 복지서비스는 공급과 수요자의 관계 성립에 따라 복지 성격이 달라짐

“의료나 교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작용으로 공급과정과 이용과정이 일체화되어 있다. 그래서 공급 측에서는 자본설비나 기계가 아닌 공급하는 인간노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동시에 이용하는 측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일체화된 프로세스에의 주체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는 제공자에 따른 일방적인 급부로 볼 수 없고 이용자와의 공동작업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서비스의 공급은 영리기업과 소비자라는 시장에서의 유사상품 판매 관계가 아니며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성립되어야만 복지(well-being)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스즈키 츠토무(鈴木, 2009)

2) 복지서비스와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사회적 공공성 재구성

- 국가와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 폭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 전략. 따라서 복지정책, 정치, 예산 등에 대한 사회역량을 강화
- 사회적경제를 통해 공공성의(복지서비스) 재구성은 이익과 권한 그리고 편익을 사회적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

○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조절 메커니즘

- 사회적경제는 복지예산을 국가의 재분배 영역에서 시장교환과 사회적 자본확장. 과거의 사회적경제가 경제활동의 문제해결이 우선이었다면, 현재는 소득 불평등, 취약계층지원, 고용의 관점에서 선순환 경제,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 방안의 주체 등으로 진화
 - 경제적 측면 :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경제활동 참여 인력확대
 - 사회적 측면 :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 한국 사회적경제는 고용,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깊음

- 2008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
- 사회적기업제도 도입 전에도 생산공동체운동을 시작으로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이 진행
- 1996년 자활 시범사업은 특별취로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 시장영역 외에 제3섹터에서 유용한 일자리를 창출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자활사업은 공공부조의 형태로 제도화 됨. 자활사업의 제도화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자활사업 경험을 통해 적지 않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출. 자활사업이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인적, 물리적 토대를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증가

- 돌봄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은 사회적 기업의 핵심 목적 중 하나. 개인이나 가족 등 사적 차원에서 제공되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서비스 욕구 증대, 돌봄기능을 담당하던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거치면서 공적 개입이 불가피해짐.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제공 능력이 확대되면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경제조직도 증가
-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맥을 같이 함. 사회서비스 분야가 갖는 일자리 창출 역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서비스 제공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복지정책 강화뿐 아니라 여성 노동참여율 저조 문제, 출산율 감소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근로 연령 세대인 한 가족의 빈곤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2008년에 사회서비스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이 확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의 제공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음

3)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역복지의 활성화

○ 대안적 조직, 협동조합

-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경쟁시장에서 활동하는 위계적 기업구조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활동의 주체, 조건, 일정, 방식은 조합원 자신이 결정하고 경제활동에서 창출된 소득은 균등하게 배분하거나 노동시간, 숙련도, 기타 조합에서 결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됨
-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운영 원리는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사회적 자본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작동하게 됨
- 협동조합은 노동중심의 조직. 따라서 협동조합은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됨
 - 서비스 분야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협동, 신뢰, 네트워크가 중요시
 - 특히 개개인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돌봄, 보건의료 등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적합

· 사회적협동조합은 대인적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 사회적 약자의 돌봄, 협동조합으로

- 고령자 돌봄서비스,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자의 취업지원을 도모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영역은 지역 내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영역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복지 실천에서의 복지는 주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가와 협동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시민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실천전략
- 사회적경제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자원개발 등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것은 시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실현

2. 원주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

가.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중간집

-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안전과 편의를 배려한 설비, 설계함과 동시에 복지서비스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된 주택공급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며, 고령자의 생활특성 배려한 주택 및 부대시설의 공급, 그리고 G-케어매니저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
- 주거와 복지를 연계함으로써, 고령자 등의 생활특성을 배려한 배리어프리화된 주택 등과 G-케어매니저에 의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병행하여, 고령자 세대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
- 병원에서 막 퇴원하였거나, 질병과 장애로 인한 불편으로 재활이 필요한 주민들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24시간 돌봄을 하고 회복을 돕는 곳
-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사회와 가정에 복귀하기에 아직 이른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와 생활케어 받을 수 없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음. 환자와 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는 가정은 요양병원과 같은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집처럼 편안한 소규모 공간에서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의식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절실함
- 돌봄과 치료, 재활을 돕는 중간집 형태의 돌봄공간이 우리 마을에 세워지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겪었던 고충이 해소될 수 있음

나. G-케어홈 (가칭)

- 설치
 - 마을 내 빈 집이나 유휴시설을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요양공동가정생활] 형태로 설립할 수 있음
 - 노인공동가정생활의 규정에 맞춰 5~9명 정원으로 구성하되, 마을주민에게 열린 공간도 제공
 - private space : 침실은 1인 1실로 개조
 - semi-private space : 거실은 생활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설정
 - public space : 마당에 텃마루나 정자를 설치해 마을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주민교류공간)

- G-케어홈 가까이에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케어팜’ 효과 기대

○ 돌봄 서비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자와 주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 지자체 내 ‘방문간호 스테이션’을 설치해, 공동으로 관리
- 방문요양 : 인근 방문요양 서비스가 G-케어홈으로 찾아오도록 활용
- 빨래 서비스 : 옷과 이불 등 G-케어홈과 개별 노인가정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 후 가져오는 서비스 운영
- 도시락·반찬 서비스 : G-케어홈에서 식사할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 운영. 지자체 내 ‘푸드뱅크/푸드트럭’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관리

○ 운영체계

- 사회적 농업(지역서비스 공동체 유형 등) 또는 치유농업 활용
- G-케어홈 위탁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비영리 법인설립 또는 전환 필요
- 마을 주민들이 G-케어홈의 운영위원회에 참여
- 마을돌봄 활동가(G-케어매니저)로써 1인 이상 활동

○ 지원체계

- 권역 설정 : 4~5개 정도 인근 마을을 묶어 ‘권역’으로 설정.
기존에 정부의 농산어촌 지원사업으로 설정된 ‘권역’일 경우, 그대로 활용
- 케어셔틀 : 마을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이동을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이 자원해 맡았으나, 이 기능을 권역 내 돌봄버스 운영으로 분산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 : 원주를 중심으로 강원도 내 방문의료 사업을 주도하는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협력 및 지원. 의사의 진료나 처방전이 필요할 때, 협조 가능
- 방문간호 스테이션 : 지자체 내 방문간호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문간호 스테이션’ 설치. 의료사협의 지원·관리로 지역 내 중복처방 문제해결과 간호인력 배치

○ 지방자치단체

- 지역 내 노인 돌봄을 마을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 특히 지역 내 노인 돌봄 같은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사회적농업,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의 관련 제도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협력기관

①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주민조직)

- 빨래, 도시락·반찬 서비스 외에 마을돌봄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에 달려있음
- 마을 한 두 곳으로는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4~5개 마을이 모인 권역, 더 나아

가 지역 내 여러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② 외부 협력 - 공공기관 등

- 지역 외부에 관련 사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면, 행정에서는 적극 지원하여 협력 관계를 조성할 필요 있음

③ G-케어센터

- G-케어매니저(마을돌봄활동가) 발굴 및 양성교육을 담당
-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조직에 대하여 행정 지원업무
- 마을돌봄학교 등 교육기획 및 운영
- G-케어 모델 개발

다. G-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

- G-케어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돌봄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주민 돌봄조직에는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돌봄의 대상자이면서 돌봄의 제공자인 주민 모두가 참여하면 대상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돌봄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 주민돌봄조직은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적합한 법인의 형태로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들 수 있으며, 주민돌봄조직의 구성과 목적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 왜냐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돌봄을 제공하는 주민과 돌봄을 받는 주민(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돌봄을 제공하는 공익적인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
- 농촌생활은 농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안팎의 다양한 사람, 단체, 기관 등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며, 마을주민이 스스로 함께 나서 학습하고 협력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문제해결을 하며 이미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어 학습조직에서 시작하여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자연스럽게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봄
- 또한, 지역사회를 떠나기 싫어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 노인들의 매칭으로 기존 주민들과 새로 진입하는 귀농·귀촌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마중물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의 융합은, 자원을 발굴하고, 문제해결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원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복지의 실천내용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추진력과의 결합하여 신뢰 등의 사회자본으로 확장된 복지커뮤니티가 전개될 것이라고 봄

라. 케어매니저와 컨트롤타워의 중요성

○ 케어매니저의 중요성

본 연구에서는 민간 중심의 통합돌봄 실천 사례를 주로 검토했으나, 2020년 원주에서 진행된 통합돌봄 선도사업도 살펴 봄. 이상의 사례에서 논의된 바와 본 연구자들의 미팅 및 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중요하게 거론된 것이 케어매니저의 필요성과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임.

케어매니저는 여러 돌봄이 단선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의 지휘관이라 할 수 있음.

강원의료사협이 의료를 중심에 놓고 복지 영역으로 돌봄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서도 의료와 복지의 연결이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함. 의료는 의료로서의 전문성이 있고, 복지는 복지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기에 이 둘만 연결하기에도 중간자 역할이 필요함. 여기에 주거, 영양, 금융, 이동 등의 복합적 돌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플랜을 세울 사람이 바로 케어매니저라고 할 수 있음.

○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케어매니저와 함께 또 하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컨트롤타워임. 민간끼리의 역할에서도 조정자가 필요하겠지만, 공공 행정과의 역할 분담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로 자리 매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함.

특히, 통합돌봄이 갖는 특성상 지금까지의 선별적 복지 전달체계가 아니기에 시민 전체를 향한 돌봄의 구축은 돌봄의 욕구 파악, 실천, 조정, 성과 관리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정책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임.

지금까지처럼 일방적으로 공공 행정이 재원을 쥐고 상명하달식의 체계로는 통합돌봄에 대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마.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앞의 시사점 단락에서도 언급했지만, 통합돌봄이 각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행정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함.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이 갖고 있는 비영리적 사업 성과 사회적 가치를 탑재한 공공성은 휴먼서비스로서의 통합돌봄 전달에 가장 효과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의 노인장기요양처럼 너무 민간-이윤 중심으로만 전달체계가 갖춰지면 통합돌봄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좌초하게 될 것임. 반대로 공공행정이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이

갖고 있는 경직성과 비효율성 때문에 이 또한 제대로 된 통합돌봄을 정착시키지 못할 것임.

그렇다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단독으로 의료, 주거, 복지, 영양, 이동, 문화 등 다양한 통합돌봄의 욕구를 담아내기도 힘들 것임. 그렇기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는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지역 차원에서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이를 지자체 또는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비즈니스화 하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델이 시도되지 않고 있지만,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도 지역이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곳도 지역이기에 이에 대한 역량을 사회서비스 업종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이나 보험업계가 노인장기요양 및 돌봄을 시장화하려고 진입하는 것에 대항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컨소시엄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를 통한 사업연합체를 만드는 것까지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야 함.

바. 지역사회 및 마을 주민의 참여

○ 통합돌봄이 새로운 필요와 염원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전달체계 내에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또 한 축으로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요함.

강원의료사협의 건강반장 활동가, G-케어 사업에서의 케어매니저, 밥상복지관의 마을지킴이 활동 등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었고 현재까지도 의미 있게 거론되는 것이 주민의 참여임. 이것이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도 차별성이 있는 것이고 향후 전개될 통합돌봄이 새로운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는 자원봉사로 가능하지만, 노인일자리 및 중장년 일자리 등으로 시간제근무 방식의 활동으로도 참여할 수도 있음. 타임뱅크 등 지역화폐 개념으로 서로의 필요를 호혜의 과점으로 전달하고 저장하고 미래에 나눠 쓰는 방법도 있을 것임. 핵심은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노후와 부족한 돌봄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함.

사. 재정 문제와 공공 행정의 의지 문제

○ 통합돌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통합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의 재원이 어디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 임. 또 이 재원이 어떻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함. 공공행정의 세금과 보조금으로 진행될 것인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할 것인지? 전달체계는 100% 공공행정에서 할 것인지? 정반대로 민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섞어서 타협할 것인지?

○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통합돌봄이 갖고 있는 성격으로 인해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아주 중요함. 그러하기에, 공공행정에서도 지자체의 의지가 아주 중요함. 이것은 여러 연구자들도 주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실천적 사례에서도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임.

원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하면서도 존엄한 노후를 보장한다면, 지금까지의 안이한 모습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실천적 사례에서 거론된 것처럼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전담 부서의 신설 및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의 구조도 갖추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남훈 외 (2020), 「농촌형 커뮤니티케어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千恵蘭(2021)「地域における非営利・福祉協同組織の役割—韓国原州における社会的協同 組合の取り組みを中心に—」佛敎大学大学院社会福祉学研究科・専攻 博士学位論文
- 강원도(2020.12)『제2차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 강원도(2021)『2021-2040 강원도종합계획』
- S.자마니&V.자마니 지음/송성호 역(2012),『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보건복지부(2018.11.20.)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 정책브리핑 (2020.3.6.)「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